

환동해 경제협력의 필연성과 정책대안*

김 봉 길 · 김 인 중

도야마대학 경제학부 교수 · 강원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목 차 >

- | | |
|-----------------------|-------------------------|
| I. 서 론 | V. 환동해 경제권의 가능성(산업협력모델) |
| II. 환동해지역의 지정학적 변화 | VI. 결론 |
| III. 동아시아지역의 지역주의 움직임 | 참고문헌 |
| IV. 환동해 경제권 형성의 필연성 | Abstract |

Key words(중심용어): 환동해 경제권(East-sea Rim Economic Zone), 무역결합도(Trade Intensity), 사실적인 경제통합(De facto Economic Integration), 제도적 경제통합(De jure Economic Integration), 산업협력(Industrial Cooperation)

국 문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환동해지역의 지정학적 변화와 경제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경제권 형성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환동해권의 범위는 동해와 직접 접하는 한국, 일본, 북한, 중국의 동북3성 그리고 러시아의 극동지역이다. 다만 통계구득상 본 논문에서 환동해권 경제협력은 한 중일을 중심으로 한다. 제시된 대안은 다음과 같다. 환동해권 경제협력에 있어서는 공간적·시간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는 점진적이고 중층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점진적인 환동해 경제협력의 확대는 동북아시아의 서브지역으로써 동북아시아 경제권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환동해 경제협력은 가능한 지역이나 산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환동해 나아가 동북아시아 경제권을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환동해 부존자원을 활용한 소재산업협력이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이다. 그러나 경제협력은 각국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고려한 상호신뢰하에서 실행 가능하다. 상호이해증진과 각국의 정치적 리더십 또한 지역경제권을 형성하는 데에 필요하다. 특히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주도권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9-362-A00011)

I. 서론

경제의 글로벌화와 지역주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성장 센터로서 부상하고 있는 동아시아에도 2000년대 들어와 FTA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경제권 형성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¹⁾ 그러나 한중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시아의 경우는 역내상호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경제권의 공백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정치적·경제적 제약요인에 의해 국가간 인접하는 지역간의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국지적이고 기능적인 협력이 진행되어 왔을 뿐이다.

동북아시아의 한 권역인 환동해지역의 경우도 지역경제권 형성과 관련하여 민간을 포함한 지방정부간의 활발한 교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하여 지금까지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동아시아를 둘러싼 정치·경제 관계가 급변하는 가운데 환동해지역에서도 역내경제권 형성과 관련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환동해 경제권 형성과 관련하여 역사·정치 문제를 포함해 극복해야 할 난제가 많지만, 지금까지 축적된 지방정부 주도의 국제교류·협력을 기반으로 한 제도적인 지역경제권 형성을 추진해나가야 할 시점에 왔다고 할 수 있다.

환동해지역은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서, 각국의 변방으로 남아 있었다. 역사적으로 한중일러간 충돌의 장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지정학적 특성상 환동해 경제권 형성을 위해서는 상호신뢰하에 점진적이고 중층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경제권이 형성된다면 그만큼 가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환동해 경제권은 광의의 동북아시아와 동아시아의 서브지역으로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동아시아 공동체를 추진하는 데 있어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한중일 3개국을 중심으로 하는 환동해 지역의 지정학적 특징과 경제권 형성 움직임을 살펴보고, 동지역에 있어서 경제권 형성의 필연성과 가능성을 검증한다.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대안으로 환동해 자원을 활용한 산업협력모델을 제시한다. 끝으로 환동해 경제권 형성을 위한 주요 과제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II. 환동해지역의 지정학적 변화

1. 환동해지역의 지정학적 특징

동북아시아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그 지역범위는 명확하지 않다. 지정학적으로 동아시아나 동남아시아 이상의 애매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동남아시아라고 하면 일반적

1) 우리나라는 WTO 다자간 협상에 비해 FTA는, 협상 대상국과 협상 분야를 선택할 수 있으며,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김현중 2005, 3-9).

으로 ASEAN 10개국을 지칭하지만, 동북아시아에 대해서는 아직 공통된 개념이 없다.

동북아시아의 가장 광의의 개념은 국제정치·경제를 거론할 때 주로 사용되고 있는 국가단위의 개념이다. 이 경우 한국, 중국, 일본, 북한, 몽고, 대만, 러시아 등이 포함된다. 한편 좁은 의미의 동북아시아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주도의 협력관계에 중점을 두는 개념이다. 이 경우는 동해와 직접 접하는 한국, 일본, 북한, 그리고 중국의 동북3성, 러시아 극동지역을 포함한다. 좁은 의미의 동북아시아 개념은 환동해지역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환동해지역은 협의로 동해 주변지역과 그 배후지를 지칭하는 것으로, 한국의 동해안 지역과 일본의 도야마, 니카타 등의 동해 연안지역 및 배후지역, 그리고 러시아 극동지역, 중국의 동북 3성 등 각국의 동해안 연안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동북아시아 및 환동해지역은 구성단위 및 개념이 명확하지가 않아 연구의 목적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²⁾

이처럼 동북아시아 및 환동해지역의 구성단위는 국가와 국가의 일부지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이다. 따라서 경제권 형성과 관련해서도 ASEAN, NAFTA, EU와 같은 지역경제로서의 통일성을 결여하고 있고, 동북아시아 및 환동해라는 지역특성을 고려할 때 지역경제권 형성과 관련한 연구에서도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지역경제권 형성은 제도적인 지역경제권(Regionalized Economic Zone)과 국지적 경제권(Localized Economic Zone)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도적 지역경제권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지역주의이고, 다수의 국가 및 지역이 제도적인 협정을 통하여 협정국간의 관세·비관세 장벽과 같은 무역장벽의 완화 및 철폐 등 경제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다. 국지적 경제권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개념규정이 없으나³⁾, 국지적 경제권은 국가간의 공동이해관계에 있는 특정지역만을 상호 개방하고, 무역·투자, 인프라 정비, 자원개발 등을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국지적 경제권의 특징은 지리적 접근성과 역내상호의존관계 및 보완관계에 기초한 다국적 기업을 포함한 민간자본의 이운동기에 의하여 추진되어 온 「기능적 경제권(Functional economic zone)」의 성격도 갖고 있다.

지금까지 환동해 연안국 간에는 제도적 경제권보다는 지방정부간의 협력이 중심인 국지적 경제협력이 선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⁴⁾ 그 결과 환동해지역의 핵심국인 한중일을 중심으로 역내무역과 투자확대로 인한 경제적인 상호의존관계가 심화되면서 시장주도의 경제통합(De facto integration)이 진전되어 왔다. 최근에는 한중일 3국이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제도적인 경제권 형성(De jure integration)을 위한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정부간 대화채널이 전혀 없었던 냉전체제붕괴 직후의 상황과는 달리, 국가간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정부간 대화채널이 구축·강화되어 왔다.

2) 일본에서는 일본과 접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환일본해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명칭문제로 인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동북아시아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환동해지역의 경우 좁은 의미의 동북아시아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한다. 대상지역은 한국, 일본, 북한, 그리고 중국의 동북3성, 러시아 극동지역을 포함한다(金奉吉, 2005b).

3) 국지적 경제권에 대해서는 金奉吉(2005a) 참조.

4) 지방정부 중심의 협력사례로는 1992년부터 시작된 「동북아시아지방자치체 연합」, 1994년부터 시작된 「동북아시아지역국제교류/협력 지방정부 서밋」 등이 있다.

2. 환동해지역을 둘러싼 복잡한 국제정치 구도

환동해 경제권 형성과 관련한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가 경제권 형성이 가져올 무한한 경제적 잠재력과 함께 극복하기 어려운 정치적인 제약요인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이다.

먼저, 환동해 연안 국가는 경제발전단계는 물론이고 정치체제 등에 있어 매우 다양하다. 경제체제를 보면 한국과 일본은 OECD에 가입한 선진국으로 성숙한 시장경제국이지만, 중국, 몽골, 러시아는 시장경제로의 이행국이다.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제발전단계를 보면 국가간의 격차가 너무 크고 확대되어 역내경제의 양극구조가 갈수록 선명해 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다양성은 상호보완의 여지가 많고, 그만큼 새로운 협력이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환동해지역의 경우는 다양성의 정도가 너무 심해 오히려 제도적 협력체제 구축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환동해지역에는 냉전시대의 잔재라고 할 수 있는 정치·역사 문제가 상존하고, 그로 인해 국가간의 대립과 불신이 남아 있다. 한국과 북한, 중국과 대만간의 긴장관계가 지속되고 있고, 일본과 북한은 아직까지 국교가 없다. 일본과 러시아, 일본과 중국 간에는 영토문제가 남아 있다. 특히 중국은 아직까지 북한과의 관계를 배려하고 있는 등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긴장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셋째, 국가간의 역사인식에 대한 차이도 동 지역의 평화, 안전보장, 신뢰관계 확보에 커다란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의 수상이나 정치인들의 신사참배가 한일, 중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커다란 요인이 되어 왔다.

넷째, 주도권 확보 문제가 있다. 일본은 지금까지 동아시아경제를 견인해 왔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고, 동아시아 경제권 형성에 주도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대국으로서의 입장과 1990년대 이후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동아시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동아시아 중시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국도 일본과 중국에 대한 대항의식이 강하고, 중국과 일본의 주도권 확보 경쟁의 중개역할을 함으로써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주도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많은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최근 환동해지역에서도 한중일 3국 정상회담 개최가 정례화 되는 등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극복하고 상호신뢰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움직임의 배경은 한중일을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이다. 요약하면 중국의 경제대국 등극과 그에 따른 다자간 중시의 중국외교(凌光星 2009, 58-59), 미중관계의 개선, 환동해지역에 대한 주변국의 중요성 인식 등이다(中島朋義, 2006).

3. 환동해지역 경제의 구조변화

21세기 들어 세계경제의 성장축은 북미와 유럽경제권에서 동아시아 나아가 한중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한중일의 평균 경제성장률을 살펴보면 1970~90년대에 걸쳐 세계평균을 크게 웃도는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기록하였다. 특히 1990년대에는 동아시아 외환위기와 일본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5.2%, 중국이 10%를 넘는 고도성장을 기록하였다. 3국의 평균 수출증가율 역시 세계 평균보다 높다(<표 1> 참조).

<표 1> 한중일의 GDP·수출 증가율 (단위 : %)

	한국		중국		일본		3국 평균		세계 평균	
	GDP	수출	GDP	수출	GDP	수출	GDP	수출	GDP	수출
1970~79	8.8	33.5	5.6	24.5	4.6	18.1	6.3	25.3	3.9	18.3
1980~89	9.0	11.8	10.0	11.3	3.9	7.7	7.6	10.2	3.0	5.0
1990~99	5.2	8.8	10.2	13.4	1.0	4.7	5.5	9.0	2.3	5.9
2000~08	4.7	14.5	10.2	21.5	1.7	7.9	5.5	14.6	3.2	13.7

자료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April 2010.

DRI, *The World Economic Outlook*, Third Quarter,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Yearbook*, 각년도.

동아시아 경제는 1970년대부터 일본이 무역과 투자를 주도하면서 일본을 중심으로 무역과 투자를 통한 「중층적인 구조변화」의 연쇄를 형성하여 발전하는 독자적인 역내상호의존적인 발전패턴을 보여 왔다고 말할 수 있다.⁵⁾ 그러나 일본 중심의 동아시아 경제 질서는 1990년대 이후 커다란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가장 큰 변화는 중국과 일본의 자리바꿈이다. 중국의 경제규모를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구매력지수 기준), 1990년 3.6%에서 2008년에는 11.4%로 상승하였다. 반면 일본은 9.1%에서 6.3%로 급속히 저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경제규모는 1990년에 일본의 40% 수준이었으나 2008년에는 165%로 확대되었다. 중국의 경제규모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표 2> 한중일의 세계GDP 비중 및 전망 (단위 : %)

구매력지수 기준	1990	2000	2008	2010	2014
한국	1.4	1.8	1.9	1.9	2.0
일본	9.1	7.6	6.3	5.9	5.4
중국	3.6	7.2	11.4	13.2	16.2
소계	14.0	16.6	19.6	21.1	23.6
명목환율 기준	1990	2000	2008	2010	2014
한국	1.2	1.7	1.5	1.4	1.6
일본	13.4	14.5	8.1	8.6	7.8
중국	1.7	3.7	7.1	8.7	11.1
소계	16.3	19.9	16.7	18.7	20.4

자료 : IMF(2009),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09, Database.

5) 이러한 동아시아 경제발전패턴을 설명하는 이론모델이 소위 「기러기편대 모형」이다(Kiyoshi Kojima, 2000).

<표 3> 한중일의 수출의존도

(단위 : %)

1995년	수출국·지역						
	한국	일본	중국	동아시아	EU	NAFTA	미국
한국	-	13.0	7.0	33.6	13.3	20.6	18.5
일본	7.1	-	5.0	29.6	16.1	29.7	27.5
중국	4.5	19.1	-	30.6	13.6	17.8	16.6
2008년	수출국·지역						
	한국	일본	중국	동아시아	EU	NAFTA	미국
한국	-	6.7	21.7	40.1	13.8	14.0	10.9
일본	7.6	-	16.0	35.0	13.4	19.4	16.9
중국	5.2	8.1	-	20.6	20.0	20.7	18.1
동아시아	4.6	6.7	8.9	34.0	15.3	17.1	14.9

주 : 동아시아는 ASEAN10개국과 한국, 일본, 중국임.

자료 :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Yearbook*, 각년도.

교역관계도 미·일에서 미·중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1990년대까지는 동아시아의 신흥공업국과 아세안의 주요 무역상대국은 미국과 일본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와서는 중국이 최대 무역상대국으로 부상하였다. 동아시아 국가간의 역내무역을 보아도 2000년대 들어와 중국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일본이 여전히 기술집약적인 부품소재의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으나, 그 역할은 중국에 비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중국이 세계경제에 있어서 공급거점(Manufacturing hub)과 중심시장(Purchasing hub)이라는 「2중의 허브(Dual hub)」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동아시아 경제구조의 변화 속에서 환동해지역은 향후 역내경제협력을 강화해나가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선결과제가 있다. 한중일과 몽고, 북한 등 다른 환동해 연안국가간의 경제발전격차를 해소하면서 경제협력관계를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한중일 3국간에는 무역·투자를 통한 사실상의 경제통합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지만 몽고, 극동러시아, 북한 등은 경제발전이 뒤쳐져 있고, 경제협력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과 북한과 일본간의 국교정상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Ⅲ. 동아시아지역의 지역주의 움직임

1. 동아시아지역의 경제권 형성 움직임

환동해 경제권 형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관건은 넓게는 동아시아지역의 경제권 형성과 관련한 움직임과, 좁게는 동지역의 핵심국인 한중일간의 경제협력 정도이다. 한중일 3국은 각각 동아시아

아국가의 하나로서 뿐만 아니라 3국간에도 긴밀히 협력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동아시아는 많은 정치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면서도 경제적으로는 무역·투자를 통한 역내국간의 상호의존관계가 급속히 진전되는 사실적인 경제통합의 심화 지역이다. 동아시아지역은 1990년대까지 제도적인 지역경제권 형성에는 소극적이었다. 역내경제협력에 있어서도 ASEAN의 내정불간섭, 의사결정의 전원일치제 등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참가국의 자주적인 협력관계가 중심이었고, 국가간의 협정에 의한 제도적인 경제통합의 사각지대였다.

그러나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계기로 역내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동아시아 지역의 역내경제권 형성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 동아시아지역에서의 경제권 형성 움직임을 보면, EU, NAFTA와 같은 지역전체의 경제권을 형성하려는 움직임보다는 2국간·복수국간 FTA가 추진되어 왔다는 점이다. 동아시아지역의 FTA 네트워크를 보면, 한중일의 3개국이 각각 ASEAN과 FTA를 체결하는 “ASEAN+1” 혹은 ASEAN 각국과의 2국간 FTA를 추진하는 형태가 중심이다.⁶⁾

<표 4> 동아시아내 FTA 체결 현황(2010.1. 현재)

	일본	한국	중국	ASEAN	인도	호주	NZ
일본	-	○	△	◎	◎	○	△
한국	○	-	△	◎	○	△	○
중국	-	△	-	◎	△	○	◎
ASEAN	◎	◎	◎	◎	◎	◎	◎
인도	◎	○	△	◎	-	△	○
호주	○	△	○	◎	△	-	◎
NZ	○	○	◎	◎	○	◎	-

주 : ◎ : 발효 혹은 교섭완료, ○ : 교섭중 혹은 교섭개시 협의, △ : 공동연구

현재 동아시아에서는 3가지 FTA 구상안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2001년의 ASEAN+3정상회담에 제출된 동아시아 비전그룹 EAVG(East Asia Vision Group⁷⁾)이 제시한 ASEAN+3을 가맹국으로 하는 「동아시아자유무역지역구상(East Asia FTA : EAFTA)」이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일본이 2006년 4월에 동아시아 경제장관회의에서 제안한 「동아시아 포괄적 경제연계(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CEPEA)」 구상이다. CEPEA 구상은 참가국으로 ASEAN+3에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추가한 16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중국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ASEAN+3 FTA 구상에 대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이 제안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尾池厚之 2007, 9). 마지막으로 동아시아지역을 포함하는 지역무역협정과 관련해 2006년 베트남에서 개최된

6) 동아시아지역의 FTA 네트워크는 ASEAN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고, ASEAN이 동아시아 경제권 형성에 있어 허브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金奉吉, 2009).

7) 1998년 제2회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제안으로, 동아시아 미래상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가 그룹이다.

APEC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제안한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구상(A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 FTAAP)」이 있다. 미국은 동지역에서의 자유무역을 촉진하고 APEC 활동을 강화하면서 지역경제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나 동아시아지역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동아시아지역의 제도적 경제권 형성과 관련해서는 EAFTA, CEPEA, FTAAP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미국, 일본, 중국이라는 3대 강국이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어느 것 하나도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하겠다. 다만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연계협정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TPP)」의 경우 FTAAP의 토대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TPP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브루나이, 칠레의 4개국이 2006년에 체결한 FTA인데, 2010년부터는 미국, 호주, 베트남, 페루가 TPP와 정부간 교섭을 진행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 등 다른 APEC가맹국들도 참여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⁸⁾

이러한 동아시아지역에서의 활발한 경제권 형성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한중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시아의 경우를 보면 지역경제권의 공백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한중일은 3국간 FTA는 물론 한일, 한중, 일중 등 2국간 FTA도 아직 체결되고 있지 않고, 각국이 「ASEAN+1」의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한중일 3국이 제도적인 지역경제권 형성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WTO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다자주의에 집착하였던 한국과 일본도 지역무역협정을 중요한 통상정책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자유무역협정의 움직임에 동참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불이익(기회비용)이 커지고 있고, 확대·강화되고 있는 EU, NAFTA를 중심으로 한 유럽경제권과 북미경제권에 대한 대항의식도 역내경제권 형성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도 동아시아 FTA(EAFTA)를 주도하고, 한중일 FTA, 한중 FTA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등 지역경제권 형성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중일FTA」와 관련한 움직임을 보면, 민간에 의한 공동연구는 2003년부터 시작되어 2008년에 민간공동연구가 마무리 되고, 2010년부터는 3국의 산학관에 의한 공동연구회로 격상되어 제1차 한중일 FTA에 대한 산학관 공동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되었다. 지금까지 한중일 FTA가 체결되지 못했던 배경에는 각국이 정치, 경제적으로 양보하기 어려운 민감한 분야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일 FTA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대일무역적자의 확대와 부품소재산업과 관련한 중소기업의 타격을 우려하고 있고, 일본은 농업과 어업 분야의 시장개방에 대한 악영향을 문제시하고 있다. 한일과 중국 사이에는 지적재산권 문제, 정치제도 및 경제시스템이 쟁점이 되고 있다.⁹⁾

한중일의 경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한일, 한중, 일중이라는 2국간 FTA 체결보다는 한중일 3국간 FTA가 보다 현실적일 수 있다. 한중일 FTA의 경우 2국간 FTA에 있어 각국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3국간 FTA에 의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중일의 경우 주로 일

8) TPP에 관해서는 石川(2010) 참조.

9) 한중일FTA에 관한 공동연구의 성과, 전략적 의의 등에 대해서는 정인교 외(2004), 片岡光彦·阿部美砂(2008), Kim & Kazuhiro(2005) 참조.

본과 중국이 대립하는 부문에 한국이 개입함으로써 상당부분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경우에도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함으로써 자신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일본기업과의 경쟁과 대일무역적자가 중국의 참가로 상당부분 해소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¹⁰⁾ 그런 의미에서 한중일 3국간의 FTA는 2국간 FTA보다 쉽게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 한중일간의 경제협력 현황

환동해지역의 핵심국인 한중일 3국간에는 1990년대 들어와 역내무역·투자, 인적교류의 증가 등 상호의존도가 급속히 높아지면서 사실적인 경제협력이 심화되면서 투자협정 등의 제도적인 협력체제 구축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한중일 3국간의 역내무역은 1990년대 들어와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한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로 일시적인 감소세를 보였으나, 2000년대 들어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5> 참조). 중국의 경우는 2000년대 들어서 한국 등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다소 감소하면서 미국과 유럽, 아세안이 비슷한 비중으로 조정되고 있다. 중국이 경제대국으로 변화함에 따른 당연한 현상이다.

<표 5> 한중일 3국간의 무역구조

(단위:%)

	일본				한국				중국			
	대 한국		대 중국		대 일본		대 중국		대 한국		대 일본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1990	6.4	5.0	2.2	5.1	19.4	26.6	0.9	3.2	0	0.4	14.7	14.2
1995	7.1	5.1	5.0	10.7	13.6	24.1	7.3	5.5	4.5	7.8	19.1	21.9
2000	6.4	5.4	6.3	13.5	11.9	19.8	10.7	8.0	4.5	10.3	16.7	18.4
2002	6.9	4.6	9.6	18.3	9.3	19.6	14.6	11.4	4.8	9.7	14.9	18.1
2004	7.8	4.9	13.1	20.7	8.6	20.1	19.6	13.2	4.7	11.1	12.4	16.8
2006	7.8	4.7	14.4	20.5	7.5	17.4	24.7	15.4	4.6	11.3	9.5	14.6
2008	7.6	3.9	16.0	18.9	6.7	14.0	21.7	17.7	5.2	9.9	8.1	13.3

자료 :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Yearbook*, 각년도.

또한 2국간 무역결합도¹¹⁾를 통하여 한중일 3국간 무역의 긴밀도(결합도)를 보면, 3국간의 무역의 긴밀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역결합도는 세계전체의 무역을 기준으로

10) 片岡光彦·阿部美砂(2008), “日中韓3カ國のFTAから見たセンシティブ部門の考察”, 阿部一知·浦田秀次郎·NIRA編, 『日中韓FTA』, 日本評論社.

11) 무역결합도 = [(B국의 A국으로의 수출액)/(B국의 총수출액)] / [(전 세계의 A국으로의 수출액)/전 세계의 총수출액]

했을 때 2국간의 무역관계가 기준치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무역결합도가 1을 넘으면 수출국의 입장에서 본 2국간의 무역관계가 긴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무역결합도는 2국가 중 수출국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기준국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먼저 한국의 입장에서 일본, 중국과의 무역결합도(2008년)를 보면, 일본과의 무역결합도는 3.0, 중국과의 결합도가 2.04로 양국 모두 1을 훨씬 넘으며, 2000년과 비교해도 일본과는 2.82에서 3.0으로, 중국과는 1.99에서 2.04로 높아졌다.

<표 6> 한중일의 무역결합도(수출기준)

2000년		수출국 · 지역			
		한국	일본	중국	ASEAN4
상대국 · 지역	한국	-	2.23	3.22	1.72
	일본	2.82	-	1.91	2.50
	중국	1.99	3.14	-	0.99
2008년		수출국 · 지역			
		한국	일본	중국	ASEAN4
상대국 · 지역	한국	-	1.55	3.35	1.84
	일본	3.00	-	2.50	2.52
	중국	2.04	1.90	-	1.31

자료 :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Yearbook*, 각년도.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과 일본과의 무역결합도를 보면, 한국과의 무역결합도가 가장 높아 한국과의 경제관계가 급속히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역결합도가 클수록 양국간의 산업구조가 상호보완적이고, 적을수록 양국의 산업구조가 경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일본과,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무역결합도가 크다는 것은 양국간의 산업구조가 상호보완적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경제통합의 중요한 추진력인 역내직접투자를 보면, 3국간의 투자는 주로 한국과 일본기업의 대중투자가 중심이고, 중국의 대한 및 대일 투자는 아직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대중국투자는 1990년대 중반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여 2005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등 과거 10년 동안 크게 변화하고 있다.

<표 7>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단위 : 억 달러, %)

국 가	1995	2000	2005	2007	2008
홍 콩	200.6	155.0	180	162.1	128.6(46.8)
대 만	31.6	23.0	21.5	33.0	23.6(8.6)

한 국	10.4	14.9	51.7	34.5	22.3(8.1)
미 국	30.8	43.8	30.6	26.3	17.7(6.4)
일 본	31.1	29.2	65.3	19.4	14.4(5.2)
싱가포르	18.5	21.7	22.0	10.6	7.6(2.8)
기 타	52.1	119.4	232.6	92.8	60.9(22.1)
합 계	375.2	407.1	603.2	378.7	275.1(100.0)

자료 : 중국 대외경제무역연감편집위원회(2009), 『중국대의경제무역』.

한국과 일본의 대중투자 추이를 보면, 양국이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동아시아 외환위기까지 순조로운 증가세를 보였고, 2001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규모를 고려하면, 한국의 대중투자 규모는 주목할 만하다. 2007년에는 34.5억 달러로 일본의 19.4억 달러보다 더 큰 규모이다. 일본의 대중국 투자비중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과 서유럽이 1, 2위의 투자대상지역이다. 총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2008년의 경우 대미투자가 34.2%, 대EU투자가 17.5% 인데 비해 대중투자는 5.0%에 지나지 않는다(JETRO 2009, 29-33).

한편 중국기업들의 판매망 확보 및 기술획득을 위한 대일본 및 대한민국 투자가 최근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미미한 수준이다. 중국의 대외직접투자의 대부분은 자원 확보를 위한 해외기업 인수, 조세회피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JETRO 2009, 167-168).¹²⁾

IV. 환동해 경제권 형성의 필연성

1. 경제협력 패러다임의 전환 : 협력에서 통합으로

진술한 바와 같이 환동해지역에서의 다자간 경제협력은 지정학적인 제약요인 때문에 복수국·지역에 걸친 제도적인 경제통합보다는 국경을 중심으로 인접지역에 존재하는 자원에너지의 공동개발을 목적으로 한 다자간 프로젝트인 국지적·기능적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FTA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지역경제권 형성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역외 국가들의 기회비용이 증가하면서 환동해지역에서도 역내경제협력체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중일을 중심으로 역내무역과 투자확대에 따른 상호의존관계가 심화되면서 시장주도의 사실적인 경제통합이 급속히 진전되어 왔다. 에너지, 환경문제, 전염병, 국제테러, 도시문제 등 국가간 및 지방정부간의 협력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협력분야의 다양화 및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환동해지역의 제도적인 경제권 형성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간 대화채널이 전혀 없었던 냉전체제붕괴 직후의 상황과는 달리, 21세기에 들어오면

12) 그러나 중국의 대한 및 대일 투자는 향후 제조업은 물론 부동산, 관광 등 여러 부문에 걸쳐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 국가간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정부간 대화채널이 다양화되고 강화되면서 한중일 중심의 협력분위기가 증대되고 있는 등 환동해지역을 둘러싼 국제정세도 호전되고 있다. 최근 한중일 모두 동아시아지역을 중시하는 외교통상정책을 밝히고 있고, 한중일 3국 정상회담 개최가 정례화 되는 등 환동해지역에서도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극복하고 상호신뢰 관계구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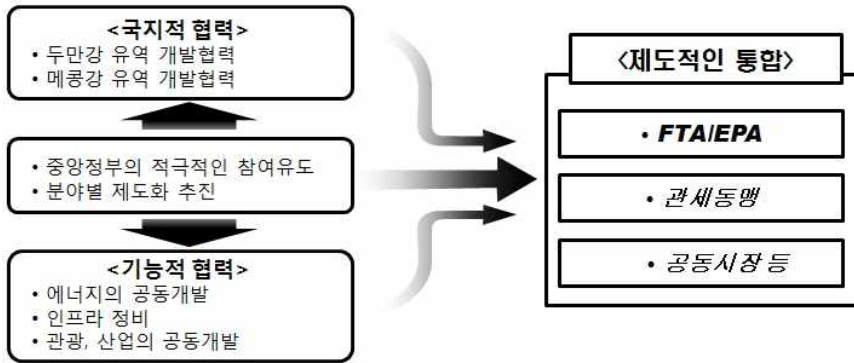
이상과 같이 환동해 경제권 형성과 관련한 여건들이 성숙되어감에 따라 환동해 국가들도 지금까지 축적되어온 지방정부 중심의 국지적·기능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제도적 경제권으로 발전시켜 역내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모멘텀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지적·기능적 경제협력력을 제도적 경제권으로 발전시키는데 성공한 지역이 동남아시아이다. 환동해지역은 동남아시아 경제협력에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¹³⁾

환동해지역에서 경제협력 체제 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존의 서브지역중심의 경제협력 네트워크와 사실적인 경제협력을 제도적인 경제통합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동북아시아 및 환동해지역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민간주도의 무역, 대외직접투자, 금융·자본자유화에 의한 역내생산 네트워크 및 Supply Chain 구축이라는 사실적인 경제통합을 제도적인 경제통합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시장 확대, 분업체제구축 등을 통한 경제성장 모멘텀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환동해 경제권은 동북아시아의 서브지역으로서, 그리고 동북아시아 지역은 동아시아의 서브지역으로서, 최종적으로는 동아시아공동체를 추진하는데 있어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 환동해 경제권의 형태

환동해지역의 지정학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지역경제권 형성은 처음부터 국가간의 협정을 통한 제도적 경제권 형성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국지적이고 기능적인 협력에서 출발하여, 이를 단계적으로 제도화시켜 나가는 중층적이고 장기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협력여건이 갖추어진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가능한 분야별로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국지적·기능적 경제권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관계국간의 제도적인 지역경제권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협력방식은 경제통합의 장애요인을 최소화하고 상호보완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13) 메콩강 유역 개발프로젝트, 성장의 삼각지대(IMS-GT) 등의 국지적 경제권은 지리적인 근접성과 자원의 공동개발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金奉吉, 2005a, Kakazu Hiroshi, 1997, 永井敏彦 등, 1993 참조).



자료 : 필자 작성

<그림 3> 환동해지역 경제통합의 중층적 접근방법

일반적으로 국지적·기능적 경제권 형성과 관련해서는 국제간의 공동개발방식과 국제분업형 협력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손병해 1992, 39-42). 실제로는 두 가지 방식이 동시에 추진되든가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등 다양한 조합도 가능하다.

공동개발방식은 개발효과가 기대되는 특정지역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국제공동개발프로젝트로, 자원개발, 공업단지 개발 등 목적에 따라 다양한 개발프로젝트가 가능하다. 이 방식은 역내의 풍부한 부존자원, 노동력, 자본, 기술 등 생산요소의 상호보완성을 특정지역 개발에 활용하는 것이다. 현재 환동해지역의 경우 에너지 공동개발, 공동관광개발 등이 추진되고 있다. 예를 들면, 러시아 극동지역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공동 개발하여 일본과 중국, 한국 등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프로젝트이다. 또한 관광산업의 공동개발과 관련해서도 환동해지역은 풍부한 관광자원이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개발업자가 공동으로 관광자원의 조사·개발을 통하여 다자간 관광코스를 개발·구축할 수도 있다. 한국의 강원도, 중국의 길림성, 일본의 도야마 현을 잇는 국제관광코스를 개발하여 일정기간 상호무비자로 관광을 허용하는 등의 협력방식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 국제분업형 협력방식은 역내국의 이윤 동기나 비교우위에 따라 상호보완성이나 다양성을 부분적으로 결합하는 협력방식이다. 특정 지역이나 분야에 한하여 무역이나 자본이동을 자유화하는 등의 협력형태이다. 각국이 특정지역 내에 경제특구나 수출자유지역, 보세가공구 등을 지정하여 중간재 무역을 자유화하는 등 각국의 비교우위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형태이다. 환동해지역의 경우 이미 기초적인 교류기반을 갖춘 경제특구와 같은 형태가 여러 개 지정되어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의 동해자유무역지역¹⁴⁾, 부산항 주변의 경제자유구역, 울산의 자유무역지역, 일본 니이가타의 수입촉진지역(FAZ), 북한의 나선특별시 등이다. 이들 경제특구를 연결시켜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통관절차의 간소화, 세제상의 우대조치 등을 통하여 공동의 경제특구로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움직임이 환동해 경제권 형성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물론 이들 지역은 자유무역을

14) 강원도는 현재 강릉과 동해를 중심으로 하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지식경제부에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위한 기능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자국의 외국인투자유치나 수출증대가 주목적이고,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통한 자유무역지역은 아니다. 따라서 관계국간의 무역 및 투자관련 법제도의 정비, 각종 규격 및 인증제도의 조정 등에 관한 협이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국가차원의 협의와 조정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은 각국의 국내경제 및 정치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관계국간의 강력한 리더십과 조정이 요구된다. 현재 시장주도적인 경제교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한중일 3국간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역내상호보완적인 산업내 분업 및 산업간 분업 등 다양한 분업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환동해지역의 경우 동 지역의 다양성이 어떤 의미에서는 상호간 교류의 폭을 넓히고, 교류를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한다는 의미에서 강점일 수도 있다. 환동해 경제권 형성과 관련한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상당한 규모의 개발 가능성과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 극동지역과 중국의 동북 3성은 자원의 보고이고, 이러한 자원 개발 프로젝트는 환동해권뿐만 아니라 세계의 에너지, 식량문제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자원, 노동, 자본, 기술 등 생산요소의 상호보완적이고 유기적인 결합으로 막대한 이익이 기대된다는 점이다. 중국과 북한의 풍부한 노동력, 러시아 극동지역의 풍부한 자원, 한국의 풍부한 개발경험과 기술, 일본의 자금과 첨단기술이 결합하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환동해지역의 지정학적인 특성상, 환동해 경제권의 기본적인 형태 및 중요한 협력분야로는 공동개발프로젝트 방식에 의한 각국 및 인접하는 지역경제를 긴밀하게 연계시키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교통물류, 전기통신, 에너지 분야 등과 관련한 인프라 정비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이 유효하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 환동해 경제권은 「국지적 경제권」 형태로, 산업, 관광, 자원개발, 환경 등 가능한 분야부터 공동개발프로젝트 형식으로 추진하는 「기능적 통합」으로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동해 경제권에 있어 인프라 정비는 공동의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환동해 경제권의 인프라 정비 협력체제 구축은 다른 분야의 협력을 촉진하고, 상호신뢰감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 중국과 러시아, 몽고, 북한의 인프라는 아직 미비한 상태라고 할 수 있고, 물류, 에너지와 관련한 인프라 개발과 협력은 환동해지역 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표 8> 동아시아의 세계 경쟁력 지표와 인프라의 수준

	2001-2002			2008-2009		
	GCI	Infrastructure		GCI	Infrastructure	
	순위	순위	점수	순위	순위	점수
한국	28	27	4.8	13	15	5.63
일본	15	15	6.0	9	11	5.8
중국	47	61	2.9	30	47	4.22
몽고	-	-	-	100	133	-
러시아	63	-	-	51	59	-

주 : GCI=Global Competitiveness Index; Score for infrastructure:1=poorly developed and inefficient, 7=among the best in the world
 자료 : World Economic Forum(2001, 2008)

환동해지역에는 현재 「두만강 이니셔티브(GTI)」라는 의욕적인 인프라협력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국경자유무역구」, 「해상유전의 공동개발협정」 등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 1995년부터 시작된 GTI의 목적은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켜, 평화와 안전보장에 공헌하는 서브지역프로젝트를 개발·실시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고 4개국이 가입하고, UNDP가 지원하고 있으나,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과가 없다고 하겠다.¹⁵⁾ 환동해지역에서는 자원 에너지 개발, 수송망 정비, 두만강 개발프로젝트 등이 추진되어 왔지만 당초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어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환동해지역의 지정학적인 특성상 국지적 경제권과 제도적인 지역경제권이라는 중층적 접근이 필요하다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제기관 등 다수의 경제권 형성 추진주체의 참여를 고려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정책기획, 합의도출, 협정은 물론 협상까지 해야 할 경우도 있다. 다만 기능적 통합에 있어서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역할은, 각국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치논리가 개입될 가능성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가능하면 민간기업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할 것이다.

V. 환동해 경제권의 가능성(산업협력모델)

환동해 각국은 역내권의 새로운 가치를 인식하고 국가별로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그러나 낙후된 이들 지역들의 경제 활성화 및 경제권 형성을 위해서는 개별적인 발전전략¹⁶⁾만으로는 부족하다. 우선 상호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장 확대 분야를 발굴하여 가치사슬 연계에 따른 공동의 산업무역모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 하나로 환동해권 부존자원을 활용한 산업무역 모델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모델은 환동해권의 풍부한 자원을 공동개발·활용한다는 면에서 기본적으로는 국제공동개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환동해 연안지역은 풍부한 지하자원과 에너지, 저렴한 노동력, 기술력과 자본력 등 다양한 생산요소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의 동북3성과 극동러시아에는 소재산업과 연관된 자원에너지가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김인중 외, 2010). 동북3성은 석유, 석탄, 철광석, 니켈, 아연, 몰리브덴 등의 자원이 많다. 극동러시아는 석유 21억톤, 천연가스 10조 4천m³, 석탄 251억톤의 자원과 티타늄, 지르콘, 니켈, 알루미늄, 아연 등의 비철금속이 많다. 한국과 북한의 동해안지역에는 마그네슘의 원료가 되는 돌로마이트가 풍부하며, 글로벌 소재기업인 POSCO가 이를 활용하여 마그네슘을 시작으로 지르코늄, 티타늄 등 비철금속 제련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¹⁷⁾ 일본의 니이가타와

15) 우리나라에서 GTI는 광역두만강개발계획이라고 불리워진다. GTI는 당초 두만강개발프로그램으로 1995년에 발족하였다. 북한은 발족 시에는 멤버로 참가하였으나 2009년에 탈퇴하였다. GTI에 대해서는 Zhang Yunling(2009), “北東アジア地域協力の新たなステージ”, 『ERINA REPORT』, Vol.87, pp.14-15 및 李燦雨(2003) 참조.

16) 중국의 장춘-길림-도문 개발개방선도구역 지정, 러시아의 극동발전전략 2025, 북한의 나선특별시 지정, 일본의 태평양-환일본지역의 광역경제권 소통전략, 한국의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등을 들 수 있다.

이바라키 현에는 세계적인 마그네슘 산업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마그네슘이 전량 외국으로부터 수입되지만 우수한 마그네슘 합금기술을 바탕으로 가공산업이 집적되어 있다.¹⁸⁾

이 같은 환동해 각국의 특화된 부존자원과 산업기술을 바탕으로 첨단소재부품산업(비철금속)의 Valve Chain을 형성할 수 있다. 우선 자동차 경량화의 핵심소재인 마그네슘과 그 연관산업은 환동해 연안지역이 가장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 마그네슘의 Supply Chain을 살펴보면 원료인 돌로마이트와 에너지원인 석탄과 천연가스, 환원제인 페로실리콘(Fe-Si), 합금원료인 알루미늄, 아연, 니켈 등이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돌로마이트가 풍부하며 규석광산을 활용하여 Fe-Si을 생산할 수 있다. 동북3성과 극동러시아의 광물자원을 수입하여 국제경쟁력이 있는 마그네슘 생산이 가능하다. 일본의 니이가타와 이바라키 현의 마그네슘 산업클러스터와 연계하면 환동해권에서 마그네슘산업 Supply Chain이 완성될 수 있다. 또한 티타늄과 지르코늄은 항공, 우주, 원자력, 의료분야에 활용되는 핵심소재인데 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환원제로서 마그네슘이 사용된다. 이 때문에 마그네슘, 티타늄, 지르코늄은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동북3성과 극동러시아의 티탄철과 지르코늄을 활용하여 한국의 강원도에서 티타늄과 지르코늄을 생산하고 환동해 연안 각국이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에 필수적인 소재 및 부품을 공급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산업무역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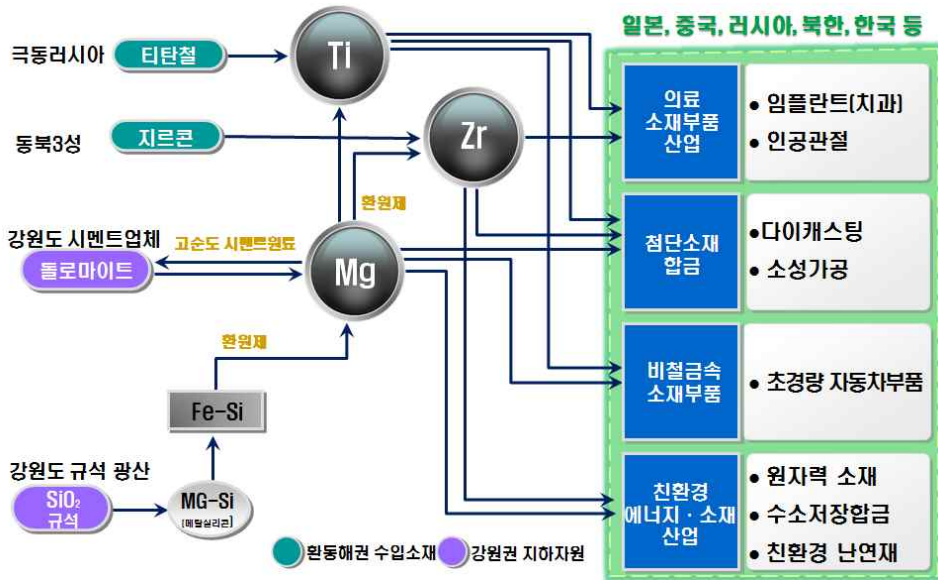
마그네슘, 티타늄, 지르코늄의 연관산업은 동북3성의 자동차, 의약, BT 등 제조업, 극동러시아의 건설 및 에너지, 한국과 일본의 첨단소재산업 육성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중간소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동해지역에서는 각국이 윈윈할 수 있는 동 분야에 대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정보를 공유하여 실질적인 연계방안을 찾는 민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VI. 결 론

세계경제의 지역주의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한중일을 중심으로 하는 환동해지역의 경제권 형성은 다른 지역에 비해 뒤떨어져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와 패권경쟁과 민족주의를 불식하고, 공동의 안전보장을 통한 공존공영을 위한 지역경제권 형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환동해지역에서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제로섬게임을 벌여 오면서 공통의 제도적인 협력의 장을 만들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국제정치적인 관점보다는 상호실용주의 관점에서 경제협력체제의 구축을 도모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환동해 경

17) POSCO는 길림성과 철강, 자동차 등 첨단산업, 자원에너지, SOC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해 MOU(2010.7)를 맺은 바 있으며, 나진항을 통해 자원에너지를 수입하기로 했다.

18) 일본에는 마그네슘(Mg)의 품위가 높은 돌로마이트 매장량이 적다. 돌로마이트에서 마그네슘을 추출하고 나면 고품위 석회석이 된다. POSCO는 시멘트회사 인근에 입지하여 시멘트사로부터 부산물인 돌로마이트를 공급받아 마그네슘을 생산하고 그 부산물인 석회석을 다시 시멘트사에 공급하는 상부상조의 부산물 활용 모델이다.



자료 : 필자 작성

<그림 4> 환동해권 가치사슬을 통한 산업협력가능 분야

제권 형성을 위한 장애요인을 최소화하고, 촉진요인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그 핵심국인 한중일이 지역경제권 형성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긴밀한 상호협력체제 구축, 그리고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현재의 신뢰관계를 한층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환동해 경제권 추진에 있어서는 점진적이고 중층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국지적 경제권이 궁극적으로는 동북아시아 공동체,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환동해 경제권 형성의 최종목표는 동북아시아, 나아가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되어야 한다.

환동해 경제권 형성과 관련한 장애요인은 경제적인 요인보다는 역사인식 문제, 중일간의 패권 경쟁, 공동체 의식의 결여 등 비경제적인 요인이 크다. 따라서 환동해지역에서의 역내협력과 교류확대를 통한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먼저 가능한 분야별로 민간부분, 지방정부간의 교류확대를 통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상호이해하고 인정하면서 신뢰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역내주도권 확보를 둘러싼 경쟁을 지양하고, 분야별 협력 체제를 강화하면서 역내 인적교류의 확대 등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정부관계자(Track1) 및 정부산하기관, 전문가 등(Track2)의 교류확대, 한중일 3국 정상회담과 같은 대화의 축적, 역사문화에 대한 공동연구의 축적 등 다층적이고, 동시병행적인 교류확대가 상호신뢰감 형성을 위한 기초가 될 것이다.

한중일이 중심이 되어 국경을 초월한 인프라 정비, 자원에너지 개발 협력, 산업·관광·환경 등 가능한 분야부터 경제협력을 강화해나가면서, 단계적으로 몽고, 러시아도 이러한 3국간 협력에 참가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일본 등 다른 역내 국가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역내경제권에 참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성숙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일본과

북한간의 국교정상화, 북한의 핵문제 해결은 환동해지역의 안전보장과 경제권 형성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환동해지역의 핵심국인 한중일간에 시장중심의 경제협력(de facto)을 제도적인(de jure) 경제통합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권 형성의 필요성에 관한 공동이해 증진과 각국의 정치적 리더십 발휘이다. 다만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에 집착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초석을 다지며 원칙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중일간에 지역경제권 형성과 관련한 협의기구 설치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위한 부문별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환동해지역의 경우 한국이라는 존재는 EU와는 다른 새로운 삼각협력모델을 구축하는데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환동해지역의 지정학적 한계를 극복하고 이 지역의 경제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과 중국의 주도권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이 전면에서 주도하고, 중국과 일본이 양쪽에서 지원하는 형태가 바람직할 수 있다. 한국도 가능하면 자국의 내셔널리즘을 자제하고 보다 높은 차원의 중개국(Hub country)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인중 외(2010). “글로벌 거점 형성전략 :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형성.” 『강원광역경제권 형성의 전략과 과제』. 강원광역경제권연구회.
- 김현중(2005). “왜 FTA를 추진하는가.” 『통상법률』. 제2권, pp.3-9.
- 손병해(1992). 『동북아경제권형성을 위한 선형자유무역지대구상과 그 기대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39-42.
- 정인교 외(2004). 『한·중·일FTA공동연구총괄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石川幸一(2010). “環太平洋戰略的經濟連携協定 (TPP) の概要と意義.” 『國際貿易と投』. 國際貿易投資研究所.
- 尾池厚之(2007). “東アジアを舞台とする各國の攻防.” 『貿易と關稅』. JETRO, 2007.9.
- 片岡光彦·阿部美砂(2008). “日中韓3カ國のFTAから見たセンシティブ部門の考察.” 阿部一知·浦田秀次郎·NIRA編. 『日中韓FTA』. 日本評論社.
- 金奉吉(2005a). “北東アジア地域における自由貿易地域形成への一考察.”
- 金奉吉(2005b). “北東アジア經濟共同体形成への展望.” 『日本海學の世紀』. 日本海學推進機構, pp.43-59.
- 金奉吉(2009). “中國のFTA政策と日中韓FTAの必然性.” 山縣受託調査研究報告書. pp.1-24.
- JETRO(2009). 『무역투자백서』.

- Zhang Yunling(2009). “北東アジア地域協力の新たなステージ.” 『ERINA REPORT』, Vol.87, pp.14-15.
- 中島朋義(2006). 『東アジア共同体の必然性』. 環日本海經濟研究所 Discussion Paper No.0605.
- 凌光星(2009). “日中韓首腦會議の戰略的位置づけ.” 『北東アジア協調体制の課題』. 現代資料出版, pp.58-59.
- 永井敏彦・小林誠・山本聰(1993). “アジア局地域經濟圏の基本構造と發展メカニズム.” 『ファイナンシャル・レビュー』. 大藏省財政金融研究所. June1993.
- 李燦雨(2003). “豆滿江開發の現状と直面する問題.” 日本國際問題研究所編. 『北東アジア開發の展望』.
- Kakazu, Hiroshi(1997). “Growth Triangles in Asia, New Approach to Regional Cooperation.” IUJ Research institute Working Paper Asia Pasific Series. No.9.
- Kim, Bong-gil & Kazuhiro Igawa(2005). “East Asian Free Trade Agreement; Strategic Aspects for Japan.” Ann, Baldwin and Cheong (eds.). East Asian Economic Regionalism. Netherlands: Springer, pp. 21-36.
- Kiyoshi Kojima(2000). The “Flying geese”of Asian economic development : Origin, Theoretical extension, and regional policy implications.

Abstract

A study on the necessity and policy alternatives of the Economic Cooperation in East-sea rim region

Bong-gil Kim* · In-chung Kim**

This study aims to suggest alternatives for the realization of the economic zone in East-sea rim region, while researching the geopolitical changes and current status of economic cooperation. The East-sea rim region generally includes countries bordering East-sea, such as South Korea, Japan, North Korea, China(Northeastern Three Shengs) and Russia(Far East Area). However, in this study, the East-sea rim region only includes South Korea, Japan, and China due to the lack of data. Possible alternatives are as follows. Multi-layered and progressive approaches that simultaneously considers the spatial and temporal factors are essential to economic cooperation in the East sea rim region. Gradual expansion of economic cooperation in East-sea rim region can take a significant role in building the Northeast asian regional economic zone. In short-term, it is advisable to enhance the economic cooperation in a specific feasible region or industries. And in the long-term, the scope of the cooperation could be expanded from East-sea rim region to North-east Asia. The most practical alternative is the materials industry cooperation using the resources of the East-sea rim region. However, the economic cooperation could be expanded under the mutual trust considering the uniqueness and diversity of each countries. Enhancing the mutual interest and the political leadership of each country are also needed to build regional economic zone. Especially, South Korea should play as an arbitrator to prevent China and Japan from fighting for regional hegemony.

■ 논문접수일 : 2010년 10월 29일, 논문심사일 : 2010년 12월 10일, 게재확정일 : 2010년 12월 15일

* Professor, Faculty of Economics, Toyama University
** Senior Research Fellow, Research Institute for Gangwon